

국제법개론

1. 국제법의 법원(source of law)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「국제사법재판소규정」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순서는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.
- ② 조약은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면, 이후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.
- ③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동등하며, 양자 간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.
- ④ 법의 일반원칙은 재판에 적용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없는 경우 재판불능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.

2. 「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」상 전권위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에 기속적 동의를 표시로서 서명한 경우 국가의 추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명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.
- ②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인 경우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.
- ③ 외교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인 경우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.
- ④ 권한 있는 당국은 전권위임장에 국가를 대표할 사람으로 한 명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여러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.

3. 「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」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며, 조약 전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.
- ②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통한 국가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.
- ③ 국가대표의 부정을 이유로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수락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국의 조약 전체에 대한 기속적 동意的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에 나타나거나 증명될 필요는 없다.
- ④ 기만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국가는 해당 조항이 조약의 잔여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더라도 그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다면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.

4. 「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」상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가가 타국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타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.
- ② 국가대표자가 증인의 자격으로 타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국가가 타국 법원의 소송절차에 결석한 행위는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.
- ③ 국가가 면제를 원용하거나 문제가 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경우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.
- ④ 국가가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타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관한 면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.

5. 「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」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.
- ②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외교관에 대해 신체와 주거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강제 집행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접수국은 파견국의 공관이 그들의 관원을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획득하는데 원조할 의무가 없다.
- ④ 접수국과 파견국 간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접수국은 해당 외교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.

6. 「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」상 기국의 관할권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.
- ②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,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.
- ③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.
- ④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행정적·기술적·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.

7. 「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」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영해에 대해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하며,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, 해저 및 하층토에도 미친다.
- ② 영해에 정박하고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은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다.
- ③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는 연안국이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.
- ④ 선박이 화물을 싣고, 내리고, 닻을 내리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박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의 바깥한계 밖에 있는 경우에도 영해에 포함된다.

8.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의 주권평등, 분쟁의 평화적 해결,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197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「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」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.
- ② 「국제연합헌장」 제51조는 자위권이 국가의 고유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,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③ 국내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.
- ④ 상설국제사법재판소(PCIJ)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국가가 주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.

9.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관할권이란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로 볼 수 있다.
- ②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며, 이러한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가 활용된다.
- ③ 대한민국 「형법」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.
- ④ 「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」상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사고로 인하여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에 대한 형사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선장의 국적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.

10. 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.
- ② 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(UPU)과 전기통신연합(ITU)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가 UN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한 협정을 해당 전문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,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UN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 재판소(ICJ)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11.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, 각 회원국은 총회에 7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.
- ②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 및 권고할 수 있다.
- ③ 회원국이 만 2년분의 부담금을 연체하는 경우 총회는 부담금의 연체 사유와 상관없이 회원국의 투표권을 허용할 수 없다.
- ④ 중요한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, 기권은 투표로 간주하지 않는다.

12.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, 이유 없는 입국 거부도 국제위법행위가 된다.
- ② 칼보조항(Calvo clause)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.
- ③ 「대한민국헌법」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.
- ④ ILC 「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」에 따르면 복수국적의 경우 복수국적 국가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13.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「세계인권선언」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.
- ② 「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」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,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.
- ③ 「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」에 따르면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(夫)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.
- ④ 대한민국 「국적법」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을 승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.

14. 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「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」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(IAEA)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② 「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」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.
- ③ 「핵무기금지조약」의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, 해당 조약에 대한 유보와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.
- ④ 핵무기의 실험·생산·비축·배치·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들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체결되었다.

15. 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「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」(부전조약)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.
- ② 「국제연맹규약」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.
- ③ 「국제연합헌장」상 국가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 원칙은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포함한다.
- ④ 「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」은 유럽국가들의 주도하에 채택되었다.

16. 「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」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,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.
- ②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, 유보의 철회를 위해서는 해당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.
- ③ 조약에 달리 규정되거나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유보를 표명한 국가가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.
- ④ 유보와 유보에 대한 이의는 모두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하며, 체결국 및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다른 국가에 통지되어야 한다.

17. 「남극조약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
 - ② 남극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 - ③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.
 - ④ 남극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활동은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, 지지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.
18. 「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」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지만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.
 - ②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통과통항과 무해통항 모두 인정된다.
 - ③ 해협 내 종래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직선기선의 채택으로 내수로 된 수역에서는 무해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.
 - ④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해 형성된 경우,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 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은 허용되지 않는다.
19. 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」은 당사국이 오존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.
 - ② 「파리협정」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결정기여(NDC)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 간 완화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.
 - ③ 「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」은 당사국의 ‘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’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대시켜야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.
 - ④ 「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」는 민간 및 공공기구도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에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청정개발체제에 참여를 허용한다.
20. 「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」 부속서상 ‘특별 및 차등대우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「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」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.
 - ② 「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」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·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,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.
 - ③ 「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」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.
 - ④ 「농업에 관한 협정」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국내보조 감축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한다.